



외국 정부기관 데이터의 민간제공에 관한 실태 조사 보고서

김재희 옮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교육사업과

이 보고서는, 재단법인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통상산업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정보화 추진 기반 구축(데이터베이스 국제화 촉진 계획 조사보고서)의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1. 배경

1994년 일본 전체 정보화 정책에 대해 큰 변화가 있었다. 그 첫째는 일본전체의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인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의 설치와 그 방향성을 명확히 한 것이며, 둘째는 행정 정보화에 대해 1992년도에

발표되었던 구상의 수준에서 실현을 위한 계획책 등, 상세한 계획이나 방침인 「행정 정보화 촉진 계획」이 공표되어 행정 정보화의 진전이 실시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보화 시책을 기반으로 일본도 참가한 G7 각료회의에서는 세계 규모의 정보화 방향이 제시되었다.

고도정보통신사회를 위한 기본방침에 관해서

1994년 8월에 정부는 내각을 중심으로 한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를 설치, 종합적인 정보화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하여 일본의 정보화 방침과 그 자세를 명확히 했다. 추진본부의 목적은 「정부가 하나가 되어 고도정보통신사회의 구축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과 더불어 정보통신의 고도화에 관한 국제적인 조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으로, 검토되어진 항목으로는

- (1) 고도정보통신사회를 향한 기본적인 방향
 - 의의, 관민의 역할, 정부 조직의 자세
- (2) 고도정보통신사회의 실현을 위한 과제
 - 공적분야의 정보화, 기반제도의 재검토, 네



트위크기반 등의 정비

- 지적소유권, 보안대책, 프라이버시 대책, 표준화
- 소프트웨어 공급, 기초적인 기술개발, 인재 육성

(3) 국제적 조직의 자세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 설치로부터 6개월 후, 추진본부는 국가정보화정책으로서 1995년 2월에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을 위한 기본방침」을 발표, 그 기본적인 방향, 실현을 위한 과제와 대책, 국제적인 공헌 등에 대한 추진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방침을 세웠다.

그 중에서는 고도정보통신사회의 의의, 고도정보통신사회의 실현을 위한 행동원칙, 고도정보통신사회의 구축을 위한 국민의 역할, 고도정보통신사회의 구축을 위한 정부 조직의 자세에 대한 방향을 제시, 일본 전체에서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과제와 대책으로서, 공공분야의 정보화 등(공공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보급 등)의 중 특히 행정 정보화에 대해서는 직원 한 사람 한사람이 언제라도 PC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축, 일반 행정 사무에 있어서 문서의 작성·보관·전달 등의 사무처리에 대한 정보시스템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행정정보의 광범위한 전자화와 고도 이용을 추진한다. 행정정보의 성·청 사이의 공유 및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데이터 항목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표준화, 성·청의 조직을 불문한 종합적인 정책 기안을 지원하는 성·청간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축, 성·청 사이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행정서비스의 고도화를 행한다.

각 성·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등의 행정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시설의 인텔리전트화 등 집무

환경의 정비 및 성·청간 네트워크의 구축 등, 각종 기반구축을 하는 것과 함께, 정보화에 대응한 제도·관행의 개선을 도모한다. 라는 구체적인 시책이 명시되었다.

더욱이, 종래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의 실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팔로우업 체제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행정정보화 추진 계획의 진보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정보시스템 각성·청 연합회의에서 취합 정리하여 총무청 행정관리국이 년 1회, 내각관방 내각내정 심의실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각성·청이 본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기타 시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각성·청이 내각 관방 내각내정 심의실에서 년 1회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 내각관방, 내각내정 심의실은 각성·청에서 보고를 받아 본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정보화 시책의 실시 현황 전체를 통상산업성, 우정성 등의 협력을 얻어 취합,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 본부에 보고한다.
-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는 내각관방 내각내정 심의실에서 보고를 공표하는 것과 함께 전문가 회의에서 의견을 구한다.
- 전문가 회의는 각성·청의 실시현황에 대한 의견을 취합,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에 보고한다.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는 전문가 회의의 의견 등을 근거로 소요배치를 강구한다. 이에, 일본정부의 정보화추진으로 커다란 일보를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에 대해서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은 이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을 위한 기본방침」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행정분야에 있어서 정보화 계획의 전모가 확실히 되었다.

〈행정정보화추진기본계획 개요〉

(1994년 12월 총무청자료에 의거)

- 행정정보화추진 이론 : 「행정정보화」는 행정사무·사업 및 조직을 통한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국민의 입장에서 효율적·효과적인 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계획목표 :
 - 정보통신기술 성과를 행정의 모든 분야에 도입
 - 정보시스템 이용을 행정 조직활동에 불가결한 것으로 정착
 - 「문서」에 의한 정보처리에서 통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화된 정보 처리
- 계획기간 : 1995년부터 5개년간
- 목적 : 행정의 질적 향상 및 국민 서비스의 향상
- 실시내용
 - 행정정보의 전자화·고도 이용 (정보제공서비스 등의 고도화), 행정정보 유통의 원활화·종합이용 (행정수속 등의 신속화·고도화) (제도·관행 개선)
- 추진체제의 충실 강화 : 행정정보시스템 각성·청 연합회의의 충실강화 (각종추진기관과의 연계, 전문가 의견반영방책의 검토 등)
- 연계·협력 : 국·지방공공단체를 통한 연계·협력의 방안 검토
- 계획 재조정, 진보상황의 공표 등 :
 - 기본계획은 필요에 따라, 공통실시계획은 매년도 재조정
 - 각성·청별 계획은 각성·청이 필요에 따라 재조정
 - 매년도, 계획의 진보상황을 취합·공표
 - 각종 조사의 충실, 정보화의 진도·성과의 파악 방책 검토

• 기타

- 공통실시 계획(기본계획 상, 각 성·청이 공동·분담하는 사항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은 1994년도 내를 목표로 책정
 - 각 성·청 계획(근본계획을 기반으로 각 성청이 책정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선행 성·청이 1994년 목표로, 기타 성·청은 1995년 빠른 시일내에 책정
- 나아가 현황과의 비교를 해 가며, 이후 행정정보화 진전의 목적, 효과를 올리면서 구체적인 최종목표를 명확히 한 〈행정정보화 추진 기본계획의 포인트〉가 제시되었다.

〈행정정보화 추진 기본계획의 포인트〉

1994년 12월 총무청자료 의거

● 행정사무 고도화·효율화

의사전달, 사무처리 고도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의 광범한 전자화, 오피스사무의 종합적 정보시스템화 - 1인 1대 PC·LAN 구축 - 시설 인텔리전트화 - 문서의 전자화에 따른 문서관리규칙 등 재조정 • 성·청간의 정보유통·처리의 고도화 기반의 구축 - 성·청간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카즈미가세키(일본 행정·사법상의 중심가)의 WAN 구축 - 분산처리 멀티미디어 등 신기술의 보급 - 오픈시스템화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에 의한 전달·보관이 전제 • PC 7인/대 • 인편을 통한 문서의 전달, 팩시밀리, 전화

행정정보종합 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에 의한 성·청간 이용 촉진 • 공동 이용 데이터베이스의 확충·구축 - 조사연구보고서, 행정계획 등 - 데이터코드, 데이터 항목 등의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테입이 주체 • 법령, 심의회 답신 통계정보, 국토수치정보 등 일부 온라인화 • 성·청별로 일부 데이터베이스화 • 데이터베이스 형식 등



● 국민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고도화

정보제공서비스 등의 고도화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가능한 행정정보의 전자매체에 의한 제공 - CD-ROM, 온라인, 자기테이프 • 각성·청의 공보관계 자료(정부공보, 보도발표 자료, 통계조사속보 등)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 • 상담, 관람 등 행정정보의 제공, 창구 업무 등의 서비스 향상 - 정보통신기술 활용, 제도면의 재조정 - 취급시간 연장, 휴일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는 문서기본 • 경제백서, 환경정보통계정보 등 일부 실시 • 우정성, 통산성 등에서 보도발표자료 등 일부 실시 • 온라인에 의한 요금 상담 • 우편저금의 자동 예치

행정수속 등의 신속화·고도화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신고·보고·상담 등의 전자화·온라인화 - 허인가 법령 등의 재조정 - 신청·신고 등의 전자화를 위한 검토 • 특허신청, 건축확인신청 등 일부에서 실시 • 각종 신청·신고 등 창구 사무수속의 간편화 - 성·청외 창구, 광역창구 - 종합창구화, 윈스톱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신청, 건축확인신청 등 일부에서 실시 • 일부는 자치체에서 실시 • 수입수속과 식품감시수속의 일원화

● 기타 기반정비

- 조직적, 인적기반의 정비, 충실 등
 - 각성청의 정보화 추진체제의 정비·충실
 - 정보화에 대응한 직원 양성 확보

정보사회에 관한 G7 각료회의의 대해서

한편,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을 향한 기본방침」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향한 일본정보화 사회로의 기본적인 자세를 제안한 것으로 1995년 2월에 개최된 G7 각료회의에서 정보화 사회를 향한 글로벌 컨센서스를 형성하기에 필요한 일본의 태도를 명확히 함과 더불어, 세계적인 조화의 움직임에 참여·공헌하는 것으로 되었다.

〈정보사회에 관한 G7 각료회의의 개요〉

(1) 정치적 메시지의 발출

G7 각료회의에서는 고도정보화는 시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과 더불어 신규사업 창출 등을 통해 세계의 고용, 경제성장에 있어 총체적으로 전인류에게 플러스가 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발출했다. 특히, 이것은 정보화가 고용면에서 마이너스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유럽에 있어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고도정보화 사회의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8원칙)을 명확히 했다.

1. 다이너믹한 경쟁촉진
2. 민간투자의 촉진
3. 유연한 규제외의 조직 구축
4. 네트워크로의 오픈 역세스
5. 유니버설 서비스 확보
6. 시민에 대한 기획균 등의 촉진
7. 정보 콘텐츠에 있어서 문화적 및 언어적 다양성 촉진
8. 개발도상국에의 배려

(2) 정책과제에의 대응에 대해서 컨센서스의 형성

고도정보화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6과제)에 대해서 그 기본적 사고 방식의 G7의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과 더불어 팔로우업 체제를 안정시켰다.

1. 상호접속성과 상호운용성의 촉진 : ITU, ISO
2. 시장역세스의 촉진, 통신분야의 경쟁촉진 등 : WTO, OECD
3. 프라이버시와 시큐리티 : OECD
4. 지적소유권의 보호 : WIPO
5.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 공동프로젝트의 실시를 위한 WG 등
6. 정보화사회의 사회적 영향의 모니터링 : OECD

(3) 공동 프로젝트에의 착수

시큐리티/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 상호운용성 등 각양각색인 과제를 명확히하며, 그 해결을 피함과 더불어 일반 개개인의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G7에서 아래의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는 이것의 실시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공동 프로젝트 리스트	간사국
1. 글로벌 인벤트리	일본, EU
2. 광대역 네트워크의 상호 운용성 실험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3. 이문화간의 교육·훈련	프랑스
4. 전자도서관	일본, 프랑스
5. 전자박물관, 미술관	이탈리아
6. 환경·천연자원의 관리	미국
7. 글로벌한 긴급위기 관리	캐나다
8. 글로벌한 헬스케어(healthcare)	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9. 온라인 정부	영국
10. 중소기업을 위한 글로벌 마켓	일본, 미국, EU
11. 해사정보 시스템	EU, 캐나다

(4) 의장 총괄 개요

- 인류가 풍요롭기 위한 공유 비전
 - 각국 정부는 민간 주도과 투자를 용이하게 함과 더불어 모든 시민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조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 우리의 비전 달성에는 협조가 불가결 고도정보화사회의 구축을 위해 기본적인 원칙(8원칙)의 명확화
- 고도 정보화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6 과제)에 덧붙여, 그 기본적 사고방식의 G7 컨센서스 형성
- 개개인을 위한 정보사회
 - 유니버설 서비스의 촉진
 - 정보사회의 고용에 대한 영향 연구
 - 민간 섹터에 의한 정보네트워크 개발과 정보관련 서비스 추진의 장려

- 적절한 교육·훈련의 실시 등
- 현재의 규제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시민의 액세스 보증
 - 시장의 개방
 - 상호운용성 보증
 - 오픈 액세스 제공
 - 공정하고 효율적인 면허 부여와 주파수 배분
 - 반경쟁적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협력 추진
 - 프라이버시 보호
 - 시큐리티 강화
 - 지적재산권
- 대화형 어플리케이션은 개개인 생활 스타일에 변화를 미치는 출현으로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 실시
- (5) 일본에 있어서의 위치
 - 세계정보 기반구조의 추진에 관계된 각종 정부과제(지적소유권, 표준화 등)에 대해서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한다.
 -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로써 일본의 세계 정보기반구조 추진에의 공헌을 어필.

목적

전술한 바와 같은 배경에서(1995년)도를 시초로 하는 「행정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라 각성·청에 의한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정보화 추진은 정부 및 관련 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계획」에 기술되어 있는 국민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고도화로서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의 전자매체에 의한 제공이나, 각 성·청의 홍보관계자료(정부홍보, 보도발표자료, 통계조사속보 등) 등의 온라인으로의 제공은 기업, 개인에 의



한 귀중한 정보원으로 되며, 특히,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있어서는 가까운 장래에 지금까지보다도 더 급속하고 다종 다양한 행정정보가 전자화되어 민간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행정정보들을 가공·재판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확충, 새로운 시장의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정보는 일본뿐만아니라 해외에서의 이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일본 정부정보의 입수

- 이용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것을 확실히 해소한 국제협조에 커다란 공헌을 할 것이다. 한편,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전자화된 행정정보의 민간정보제공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공하는 행정측, 이용하는 민간측의 체제, 제도 등의 정비되어 행정정보가 공공재로서 확립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조사는 미국 등의 행정기관과 민간 이용자의 체제, 제도, 및 문제점 등의 실태를 파악함과 더불어 일본에서의 행정정보 제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검토를 위한 기초자료의 작성을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본 보고는 그 제일단계로서, 미국의 중요 정부기관, 민간사업자나 업계단체의 실태를 조사 하고, 그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의 내용

전술한 목적으로부터, 본 조사는 문헌 등에 의한 기초조사를 근거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정부기관 및 정보제공사업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 (1) 해외정부기관의 전자화 정보제공을 위한 체제, 제도 및 문제점 실태조사
 - ① 관련법령, 규칙, 통달 등의 소재와 그 내용

- ② 조직, 체제 등의 정비와 범위
- ③ 소재정보나 이용에 관한 클리어링 기능의 유무
- ④ 유저에 대한 지원

- (2) 민간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이용, 문제점 및 요망에 대한 실태조사

- ① 제공되고 있는 행정정보의 명칭과 그 내용
- ② 정부로부터의 정보제공을 받는 경우의 수속, 계약내용
- ③ 가격설정까지의 프로세스
- ④ 정부에 대한 요망, 제안
- ⑤ 유저로부터의 제안, 또는 유저에 대한 코멘트 등

- (3) 일본의 행정정보 전자화 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기초조사

- ① 정부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파악
- ② 민간이 이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파악

〈다음호 부터는 자세하게 내용을 기술하기로 한다〉 